

“양승태 공소장, 선입관 우려”

법원, 검찰에 변경 요청 재판부도 ‘일본주의’ 지적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선입관을 생기게 하지 말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라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변호인만 출석한 채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1차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낭독은 실제 공판절차인 공판기일에 하고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사실 낭독을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제출했고 변호인들이 그동안 의견서를 몇차례 제출했는데,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해 주장하는 변호인들 몇 분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변호인 의견도 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도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서 재판을 진행하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선입점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등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해서

‘한편 주심 대법관 고영한이’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기소된 것은 없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고 전 대법관도 이 사건 피고인이지만 세부적인 공소사실은 기소된 피고인도 있고 안 된 피고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불필요하거나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재판하는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다 (언급)한 것은 아니고 지금 몇가지 예만 들었다”며 “기소된 공소사실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서 너무 장황하게 불필요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고 공소제기 취지가 약간 불분명한 부분 등도 말한 것 이외에도 몇군데 더 있다.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 정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저희 재판부가 협의해서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고 이진 일종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괜찮았다 하면 변경해주고 반드시 공소장 변경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검찰이 변경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들도 재판부와 같은 의견으로 공세에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홍길동 등”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도 거기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것인지 변호인 입장에서 특정이 안 된다”며 “불가피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급급적이면 공소사실 인부를 위해서는 특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

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이 사건 대부분 상대방으로 기재된 심의관들, 연구관들이 상대방인지 의문이 있다”며 “상관들의 잘못된 생각이 확산되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 내가 양심적, 도덕적으로 동의 안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보고서를 쓸 의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가를 법적 관점에 기초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판단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 사건은 극소수 사례와 다르다”며 “피고인들 공소사실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 기간 동안 여러가지 동가나 목적으로 행한 범행이고 지휘체계, 공모관계도 다양하다. (범행이) 은밀히 조직적, 장기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정확한 경위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직권남용인지 또 피고인들이 도대체 뭘 방어할지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이 어떤 범행에 가담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전후사정이나 범행동기,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기일에서 다섯 갈래로 나뉜 공소사실 별로 증거조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각 주제 별로 바로 조사가 가능한 증거 서류부터 먼저 조사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 선정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문화재청은 21일 열린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는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가야의 역사성에 대한 서술의 보완, 그리고 비교연구에 대한 재작성 필요성 등이 지적됐으나, 형식면에서 많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은 지난 2018년 3월 28일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1월 3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확정 되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고분군은 빠르면 오는 7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재 신청 대상’으로 결정되고, 내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2021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세계유산등재

추진에 지역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광장근교수와 함께 가야 역사여행 순회강연과 다른 가야고분군 답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탐방객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고 수목정비, 탐방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가야고분군은 호남권의 유일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24호)을 비롯한 7개 유산으로 구성

된 연속 유산이며, 영남권의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함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창령 교동 고분군(사적 제514호)이 함께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文 대통령 “국회, 민생·경제법안 신속 처리... 공수처 설치 시급”



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원위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 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나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열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 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 확대

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아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뉴시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원고 모집

5월 3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김현곤, 이하 공간정보연구원)은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제49권 1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지적, 측량, 공간정보, 국토계획, 부동산 등 국토공간정보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분량은 A4지 15매

내외다. 공간정보연구원은 공간정보와 지적 분야의 학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김현곤 원장은 “국토정보와 지적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깊이 있고 실용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학술지가 연구문과 확산의 미중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지적과 국토정보’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된데 이어, 2017년 재평가를 거쳐 현재 등재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49권 1호는 6월 말에 발간될 예정이며, 제출기한은 오는 5월 3일까지이고 연구원 홈페이지(www.kbsire.kr) 또는 이메일(j@tx.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